

일중 간의 정경분리책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최은봉·오승희 지음, 『전후 중일관계 70년』(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9)을 읽고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I. 들어가며

중국 공산당의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행해진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시진핑 주석하에서의 중국이 ‘중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명분으로 압박하는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구미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적을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갈라놓고 대립시키려는” 시도이고, 환영할 만한 “건의와 선의의 비평”이 아니라 “교관”처럼 기고만장한 설교”라고 비판하며, 그러한 시도는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 만든 강철 장성 앞에 부딪혀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인민망 21/07/02). 바야흐로 세계정세는 이제 단순히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경제적 대립을 넘어서서, 코로나19사태의 대처에서 보듯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 및 효율성을 둘러싼 진영 간, 체제 간 공방과 경쟁이라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미중 또는 구미와 중러 간의 관계양상이 대립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견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4년마다 보고서를 발간하는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는 4월에 ‘글로벌 트렌드 2040’을 통해서 20년 뒤의 세계정세와 관련해 5가지의 가상시나리오를 제시했다(미국 국가정보위원회, 2021). 첫째는 미

국과 그 동맹국 중심의 열린 민주주의가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민주주의의 부흥(Renaissance of Democracies)’이고, 둘째는 중국이 앞서 가지만 완전한 지배력을 가지지 못한 채 성장이 정체되고 국제규범이 흔들리게 되는 ‘표류하는 세계(A World Drift)’이다.

셋째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성장과 자유무역을 위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현존의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넷째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분열되어 치열한 생존경쟁을 추구하는 ‘고립 및 분열된 세계(Separate Silos)’, 그리고 다섯째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식량난 등으로 사회적 불안정이 증가함에도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대응을 강구하게 되는 ‘비극과 동원(Tragedy and Mobilization)’이다.

이상의 5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은, 사람마다 또는 그 가치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역시 첫 번째의 ‘민주주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른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가치관과는 별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바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의 제시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부흥’이 가장 선호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최근의 미중갈등이 결코 종전의 경제적 경쟁 및 대립에 그친 것이 아닌 그것을 이미 넘어선 단계에 진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모두의 언급도 그러한 의문을 내포한 것이지만, 동 보고서가 미래에 대한 5가지의 예측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구통계, 환경, 경제, 기술이라는 4가지의 구조적 변수가 발휘할 영향력과 그에 따른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의 세 가지 차원에서 형성될 역학관계가 보여주는 추이를 고려할 때 긍정적 예상보다는 비관적 예상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향후 전개방향을 좌우하는 열쇠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점이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 변수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소자화로 표현되는 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지난 20여 년 간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어 추진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환경문제나 경제성장의 한계, 그리고 기술의 발

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즉, 우리의 대응이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나라만으로는 풀어 나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국가 간 협력력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현 세계에서 주요 강대국으로 인정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서로의 상이함 및 차이점을 좁히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특히 동북아지역을 고려한다면 일본과 중국의 관계도 대립이 아닌 협력의 방향에서 진전을 보이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후 70년의 일중관계사를 분석한 저서를 마주하는 것은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다. 본고에서는 오랫동안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관계를 연구해 온 최은봉 교수와 오승희 박사의 공저인 『전후 중일관계 70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특색을 보이며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주는지를 간략히 검토한다.

II. 『전후 중일관계 70년』의 이론적 맥락: ‘반응국가’론 대 ‘적극국가’론

최은봉 교수와 오승희 박사의 저서, 『전후 중일관계 70년』은 ‘일본의 관점에서’ 전후 70년의 일중관계 역사를 검토한 역작이다. ‘일본의 관점에서’라고 구태여 강조하는 것은 시작부터 일중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중국 측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제지간인 두 분 저자는 학술적 논의에 있어서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신 분들이고, 이는 본 책자의 참고문헌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따라서 ‘일본의 관점에서’라는 점을 제기하는 이유는 논평을 위한 관점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두 분 저자의 전공이 일본의 국내정치 및 외교관계이기에 일중관계를 일본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기에 본 저서가 일본의 대중정책 및 외교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서술되었고 그에 따라 논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대중정책 및 일중관계의 역사와 향후 전개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겠는데, 이는 크게 학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술적 측면에서는 1972년의 일중 간 국교정상화는 단순히 미국의 대중접근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 또는 어떤 배경하에서 진행되고 성사되었는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에 있어서 일본 내의 어떤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등의 질문이 포함된다고 하겠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일본이 대중정책에 있어서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경분리’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위 말하는 ‘72년 체제’라는 것이 중국의 대국굴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유지될 것인지 등의 질문들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상기한 분류에 따라 우선 일본의 대중정책 및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한 학술적 논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일본의 외교스타일과 관련된 것이다. 후자는 다시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칼더 교수가 제시한 것으로 일본의 외교스타일이 ‘반응적(reactive)’이라는 주장이다(Calder, 1988). 간략히 말하면, 일본의 외교는 그 방향 설정에 있어서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방향에 편승해 반응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의 외교정책이 목적 없이 단순히 그때그때의 상황에 반응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해 성립됐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수잔 파는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해 반응적이라는 소극적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와 공격적이라는 적극성을 강조하는 견해의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은 일본의 외교정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환경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환경 및 그 변화에 맞게 연속성과 위험회피를 추구하는 전략적이고도 방어적인 대응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Pharr, 1993).

최은봉 교수와 오승희 박사의 『전후 중일관계 70년』은 후자인 수잔 파 교수의 ‘방어적’ 대응이라는 견해에 좀 더 가깝다. 서장에 해당하는 제1장의 “전후 중일관계의 제도적 접근”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는 왜 1972년에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세간의 주된 설명이 “1971년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인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중관계의 개선은 중일국교 정상화의 외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일본의 대중정책에 대한 장애물의 제거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1972년의 일중국교정상화는 전후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가능했다는 주장인 것이고, 그러한 증거로서 냉전이라는 국제적 환경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외교라는 형태로 유지했으며 그러한 경제관계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일본의 ‘정경분리 정책’이 일본의 방어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외교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후 중일관계 70년』은 수잔 파가 제시하는 ‘방어적’ 외교스타일도 일본을 결국 적극국가(proactive state)로 본다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보며 ‘반응적 국가’와 ‘적극적 국가’의 양자를 절충한 소에야 교수의 ‘틈새 외교’와 같은 ‘제한적 적극국가’론에 기울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의 바탕에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제도의 변화라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내생적인 발전’에 기반해 점진적이고도 누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마호니와 텔렌의 ‘점진적 제도변화 모델’에 의거해 전후 일중관계의 제도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잔 파의 ‘방어적 외교정책론’과 소에야(添谷芳秀)의 ‘제한적 적극국가론’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들지만, 『전후 중일관계 70년』이 기본적으로는 ‘반응적 국가론’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있는 이론적 맥락이고 주장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맥락과 관점을 가지는 것은 학문적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이해라는 목표를 위한 작업의 축적에 있어서는 토대와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이론적 맥락이라는 것이 그러한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III. 『전후 중일관계 70년』에서의 제도화 내용: ‘정경분리’와 ‘정경불가분’의 이중주

『전후 중일관계 70년』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본서의 주

장 및 이론적 맥락을 제시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 일본의 대중정책 및 전후 일중관계를 예로 해서 일본의 외교정책을 미국의 압박이나 국제환경의 변화에 단순히 반응한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서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전후 일중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며 구조화되는가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후의 일중관계가 형성되는 전반적 틀과 관련해서는, 냉전 및 샌프란시스코체제와 2개의 중국 정부라는 대외적 환경 속에서 일본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등거리전략 및 정경분리정책을 추구한다는 일본의 정책패러다임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의 정부와 평화조약을 맺는 일중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제시한다.

또한 일중관계가 변환되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추구하는 국가이익이 대외의존적인지 아니면 자율적인지, 그리고 일본의 정체성이 외생적인지 내생적인지에 따라 일중관계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제시한다. 예를 들어, 전후초기 일본의 국가정체성이나 국가이익이 외부로부터 정해지고 주어진 상태, 즉 샌프란시스코체제 형성 시의 일중관계는 4차에 걸쳐 진행된 일중민간무역협정으로 명맥이 유지되지만 미국과 대만, 그리고 국내적 반발에 직면하고 결국 ‘나가사키국기계양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정과 중단’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이 국가이익을 좀 더 앞세워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려고 했던 이케다 내각에서의 일중관계는 정부 간 관계와 민간관계가 혼재하는 ‘중층화’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층화양상은 중국의 국내적 상황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 즉 일본으로서는 중국이라는 대외적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한 것이고, 이러한 측면을 보여 준 예로서 1967년 7월에 발생한 일본인의 체포, 감금 사건을 제시한다. 일본인 상사직원이 스파이 행위로 홍위병들에게 폭행당하고 구금된 사건으로, 일본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중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외교채널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기존 제도의 한계만을 드러냈던 것인데, 일중 양국은 정경분리의 원칙하에서 추진하던 중층적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어 1972년의 제도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본서의 핵심 주장으로 연결된다.

제3장에서는 1972년의 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한다. 그중에서도 다나카 수상이 환영만찬장에서 행한 인사말 중에 담긴 ‘폐를 끼쳤다’는 표현과 전쟁종료의 시점에 대한 공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러한 공방이 “전쟁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상이한 인식”에 의한 것이고 당시에는 국교정상화라는 단기적 목적의 실현에 의해 모호하게 처리됐지만, 결국 “부정적 심리적 유산으로 사과, 책임, 화해, 정체성 등의 문제”를 남겨서 21세기 동아시아의 역사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제4장에서는 전후 일본, 특히 당시의 요시다 수상이 대만과의 평화조약을 맺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모두와의 교류를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요시다 수상이 자신의 등거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만과의 평화조약을 맺게 된 데에는 첫째로, 당시 미국 상원에서의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을 원활히 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압박과 둘째로, 정치적 독립과 함께 경제적 부흥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일본에 대해서 동남아 시장을 제시하는 미국의 유인책이 발휘됐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에서 일본의 대만과의 평화조약이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국익극대화를 위해 정책공간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제시하며, 또한 일본이 중국과 신속히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었던 배경설명으로도 제기한다.

제5장에서 제7장까지의 제3부에서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친 냉전기의 일중관계에 대해서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정경분리정책과 일중 간의 민간경제교류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정치관계가 부정적일 경우에도 정경분리정책의 실행이 경제관계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음을 일본외교청서에서 살펴본 정치관계의 양상과 일중무역관계의 양상의 관계를 통해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일중 간의 국교정상화가 1972년에 조속히 가능할 수 있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의 문화교류에 대해서 검토한다. 나가사키국기계양사건이나 가네포와 도쿄올림픽에서 보듯이 일본의 정경분리정책과 중국의 정경불가분 원칙의 상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중관계가 냉전기에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나고야세계탁구대회에서의 중국 초청과 같은 문화교류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제시한다. 제7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일본이

왜 1971년에는 중국의 유엔가입 시도에 반대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가능한 한 유지하려는 경로의존성의 측면을 강조하고 그 예로서 일본이 대안으로 제시한 ‘경과적 이중대표제안’을 제시한다.

1970년대의 일중관계에 대해서 검토하는 제4부는 1972년의 국교정상화에서 중국의 배상청구 포기가 왜, 어떻게 제시됐는가를 검토하는 제8장과 1978년의 일중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대해서 검토하는 제9장으로 구성된다. 제8장의 주요 테마인 중국의 배상포기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일본과의 평화조약에서 대만이 이미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국 인민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합법 정부라는 대안으로 청구권 포기를 교환하려 했다는 점이고, 셋째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배상금을 통한 것이 아닌 향후 진행될 일본과의 경제교류에서 추구할 수 있다는 중국 측의 계산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시함과 더불어, 제8장에서는 중국 측의 수뇌부가 1964년의 시점에서 이미 배상포기의 방침을 정했음도 지적한다.

일중평화우호조약이 성립될 수 있었던 과정을 검토하는 제9장에서는 조약성립의 요인과 관련해서, 1972년의 국교정상화와 마찬가지로, 일중 양국이 경제발전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제시한다. 공통이익이 존재했기 때문에 서로 상충적인 일본의 정경분리정책과 중국의 정경불가분 원칙이 양립할 수 있었고, 평화우호조약의 과정에서 불거진 반패권조항이나 제3국조항에서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주장인 것이다. 제9장에서는 또한 일중 간에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과 관련해서 대중정책에 대한 일본 내의 갈등과 중국의 리더십 교체와 같은 국내적 정치상황이 작용했음을 언급한다.

마지막의 제10장에서는 시진핑의 중국과 아베의 일본이 형성하는 일중관계가 종전의 1972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가늠한다. 2018년의 일중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의 아베 수상은 정치와 해양 안보에서의 ‘신뢰 구축’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후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하는 등의 협력강화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일본이나 중국이 공히 강대국을 추구하는 가운데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이 엄존하고 미중 간의 신냉전이 제기되

는 가운데서 1972년 체제가 보여 준 유연성의 모용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측면을 보이며 마무리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중 양국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며 상이함을 회피하는 유연성 속에 상호발전의 기회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내용정리에서 보듯이, 『전후 중일관계 70년』은 앞에서 언급한 일본을 ‘반응적 국가’로 보는 견해에 대해 많은 사례와 자료를 통해 비판적으로 끈기 있게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관점에서 1972년의 국교정상화를 가능하게 한 정경분리 원칙이 1952년에 있었던 대만과의 평화조약에도 유효했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민간교류에서도 작동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던 것이다. 이와 함께 『전후 중일관계 70년』은 일중관계와 관련된 추후과제, 예를 들어 중국의 배상포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분석 등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일중관계와 연관된 이론적 맥락과 향후 과제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역작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IV. 『전후 중일관계 70년』에 따른 향후 전망: ‘72년 체제’의 의미와 유지 가능성

하지만 지적하고 앞으로 과제로서 코멘트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소 중복되는 느낌이 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중국 정부와 대만 정부를 공히 대면하기 위해서 ‘정경분리’ 원칙을 취하는 반면에, 중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경불가분’ 원칙을 고수한다는 언급이 거의 각 장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본 책자가 전후 70년의 일중관계사를 시계열적으로나 주제별로 수미일관되게 검토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중요한 주제들을, 특히 1972년의 국교정상화를 중심으로 한 주제들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하나로 묶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들을 하나의 책자로 묶는 것은 그 나름의 효용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에 결코 비판하거나 회피할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묶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

표 일중관계의 변화양상

		국내외적 환경의 압박정도 및 우선순위	
		국제적 환경	국내적 환경
일중 간의 이익 공유성 여부	공통의 이익 추구 가능	1972년 체제의 성립	민간교류의 확대
	각자의 이익 추구	1952년 체제의 성립	경색된 관계의 유지

은 중복된 느낌을 안겨줄 뿐만이 아니라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단순명쾌해지지 않고 괜히 복잡해질 위험을 내포한다. 본 책자에서는 전체적인 분석의 틀을 보여 주는 제2장에 2개의 도식(그림 2-1, p. 27과 그림 2-3, p. 39)과 1개의 표(표 2-1, p. 28)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일중 간의 민간교류를 설명하는 제6장에서도 다른 도식(그림 6-1)이 제공되고 일중평화우호조약에 대해 검토하는 제9장에서도 다른 모양의 도식(그림 9-1)이 나타난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도식일 텐데 그 연관성에 대한 설명 또는 앞의 도식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이 제공되니 매우 복잡한 듯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구성이나 분석의 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의 관련 연구를 위해서도, 흥미로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중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의 역작들이 있다. 본 책자에서 소개하는 서승원(2012) 교수나 손기섭(2012) 교수의 연구를 비롯하여 일본의 다나카(田中明彦, 1996) 교수나 모리(毛里和子, 2006) 교수 등의 저작들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다나카 교수가 간략히 제시하는 국제환경과 국내환경, 그리고 일중 양국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의 설명변수들을 본 저서가 제시하는 주장과 연결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田中明彦, 1996).

위의 표는 본 저서가 주장하는 바, 즉 일중 간의 1972년 체제 성립이 미중 간의 접근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경제성장의 필요성이라는 일중 간의 일치된 공통이익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본과 중국이 맞이하는 국내외적 환경의 압박정도 또는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한 축으로 하고, 일중 간에 공통된 이익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다른 축으로 해서 일중관계의 양상을 분류해 본 것이다. 이는 본 저서의 표 2-1을 변용시킨 것이라고도 하겠는데, 표 2-1의 정체성과 국가이익이라는 두 축이 배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분석의 틀 전체가 애매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

에 체제의 변환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명확히 보여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도 제시해 본다.

달리 말하면 일본과 대만(중화민국)의 1952년 조약이 어떤 환경 및 조건에서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1952년 체제에서 1972년 체제로의 변환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론 이들 질문에 대한 좀더 간결한 설명 틀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거듭될 것이고 과제이지만, 상기한 표의 두 축이 가지는 설명력 및 명확성이 좀 더 커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본 저서에서 제시되는 경로의존성에 따른 분석의 디테일이 제시하는 설명력을 보여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거기에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저서가 제시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일중 간의 ‘1972년 체제’라는 것이 단순히 미중 간의 접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진행된 노력의 결과라면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1972년 체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핫토리(服部龍二) 교수는 이러한 측면에서 ‘72년 체제’라는 용어에 의문을 던진다. 일본의 외교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1972년의 국교정상화가 샌프란시스코체제가 합의하는 일본의 대미기축과 미일안보체제를 바꾼 것도 아니며, 그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일본의 국익을 최대한 살리려는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핫토리, 2017).

이러한 문제제기는 과연 ‘72년 체제’가 중국의 공세적 부상으로 인한 미중 간의 갈등과 대립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유지되지 못할 때 ‘72년 체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과도 연관된다. 일본의 ‘정경분리’ 원칙이 중국의 경제적 필요성과 함께 ‘72년 체제’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국굴기’가 미중대립을 가져와 일중 양국 간의 공통이익이 분열되는 현 상황에서는 ‘52년 체제’로의 회귀를 가져오는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제기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의문은 1972년의 국교정상화가 과연 미완이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미완성 때문에 현재의 일중갈등이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사과와 반성으로 과거사인식문제를 완결하고 센카쿠열도와 관련된 영토문제도 해결했다면, 현재 발생하는 갈등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

지는 못했더라도 극한대립을 회피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했을 수는 있겠지만, 갈등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갈등상황은 기본적으로 힘의 역전현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거사인식문제나 영토문제는 단지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인 것이고, 1972년의 국교정상화는 당시의 시점에서 일본정부나 중국정부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진행된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당시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완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중국지도부가 센카쿠열도와 관련된 영토문제는 후대의 지혜에 맡기겠다는 언급은 ‘도강양회’ 이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1,500년에 걸친 일본과 중국의 관계사를 정리한 대작을 발간한 보겔(Ezra Vogel) 교수의 제안이 흥미롭다. 보겔 교수는 일중 양국의 상호인식이 매우 다르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일본인이 천성적으로 침략적인 사람들이라고 확신하는 반면에, 일본은 중국인들이 다른 민족의 복종을 요구하는 자부심 강하고 오만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보겔, 2021). 그로 인한 불신 또한 매우 크며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협력적이었던 부분이 아닌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강조된 때문이라고 제시하면서, 교류와 소통의 확대에 의해 역사를 객관적으로 직시하려는 노력, 특히 강대국으로 대두한 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모두에서 언급한 ‘글로벌 트렌드 2040’이 제시한 미래의 시나리오 중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대응방안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는 학문적 작업의 실천적 덕목은 협력이 가능한 조건을 밝히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럴 경우 ‘미완’이라는 숙제를 다시금 꺼안게 될지 몰라도, 이는 역사를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는当代인으로서 협력이 가져올 평화로 더 선호한다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 아닐까.

참고문헌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편. 박동철 외 역. 2021. 『글로벌 트렌드 2040: 더 다투는 세계』. 한울엠플러스.
- 서승원. 2012. 『북풍과 태양, 일본의 경제외교와 중국 1945~2005』. 고려대학교 출판부.
- 손기섭. 2012. 『현대 일본외교와 중국』.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보겔, 에스라 저. 김규태 역. 2021. 『중국과 일본: 1500년 중일 관계의 역사를 직시하다』. 인민망 한국어판.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시진핑 주석이 전한 초심과 결심, 자신감.” 2021. 7. 2., <http://kr.people.com.cn/n3/2021/0702/c203278-9867857.html>(검색일: 2021. 7. 10.).
- 핫토리 류지(服部龍二) 저. 서승원·황수영 역. 2017. 『중국과 일본의 악수』. 역락.
- 毛里和子. 2006. 『中日關係』. 東京: 岩波書店.
- 田中明彦. 1996. 『日中關係 1945-1990』. 東京大學出版會.
- Calder, Kent E. 1988.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World Politics* 40(4), 517-541.
- Pharr, S. J. 1993. “Japan’s Defensive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Burdensharing.” In Gerald L. Curtis, eds. *Japan’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Coping with Change*. Armonk, NY: M. E. Sharpe, 235-262.

